



흐드러진 억새밭, 춤추는 가을

갈바람 불어온다. 바람결이 찾아든 억새밭은 빗무리 석양에 반짝여 파도치듯 물결친다. 일몰과 억새가 만나 벌이는 빛의 향연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아늑한 노을빛 내려앉은 그곳, 가을 정취가 이끈다. / 사진 이창훈

“신3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역량 모을 것”

11월 15일~12월 15일
제411회 2차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3년 예산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의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제411회 제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15일 열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이 이뤄졌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도정 질문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실현 방안, 제주형 트램 도입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오납 등의 문제가 부각됐다.

11월 21일과 22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교원 활

동을 침해받는 교원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기초학력 격차 해소 관련 질문들도 이어졌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6717억원 늘어난 7조63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전년도 예산보다 2284억원 증가한 1조5935억원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신3고(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제12대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새해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회기”라며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11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제주현대미술관,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했다. 24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도내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다.

한편 제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81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 등 총 9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지면 안내

종합 ▶ 1

주요 이슈 ▶ 2



생생 의정 활동 ▶ 3

내년 예산안 심사 각오 ▶ 4~5

도정 질문 ▶ 6~8

교육행정 질문 ▶ 9~10

함께합시다 ▶ 11

도의회 이모저모 ▶ 12

“민생경제 회복·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져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은 제주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예산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냉엄하게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민선8기 제주시정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은 총 7조6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5%가 늘어난 규모”라며 “2018년 이후 최고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본예산 7조원을 넘어섰다. 도 교육청도 올해보단 2284억원 늘어난 1조593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증가율은 16.7%”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도지사과 민선5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본예산

안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들의 미래 비전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민의 눈,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도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영훈 지사는 사회복지 예산을 총 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도민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07%에 그친 수준”이라며 “복지수요와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 계획은 마련됐는지, 재원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도 마찬가지”라며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생 통학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내년 수요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결산분석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7조187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3811억원이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이



8068억원에 달한다”라며 “어려운 재정상황에 결산상잉여금이 총 세입액의 11.2%에 달하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방재무의 규모나 상환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성,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여부 등을 살펴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부실경영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기관운영과 정책조정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예산만큼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와 지원예산을 반드시 연동시킴으로써 자발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보조금심의회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제도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다”며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은 물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공유재산 불허, 지역 주민 납득 어려워”

고태민 의원 긴급현안질문

고태민 의원(사진, 국민의힘, 애월읍 갑)이 애월항 LNG 주민 피해 대책 사업이 사업 부서 이기주의로 좌초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고 의원은 “애월항 LNG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담 일대 다목적 회관 건립을 통해 도민 편의는 물론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행정에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민원처리 과정도 부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했다”며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됐고, 민원 접수 3개월이 지나는데도 조치사항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 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 없이 과장 전결로 공유재산 매각 불가처리를 결정한 것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애월항 LNG인수기지 개발에 따른 양식장 폐쇄·철거 이후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토지활용 대책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환경특위 본격 활동 나서

위원장 강경문·부위원장 이경심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9명으로 구성된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11월 15일 제주도의회 제1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위원장에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을 선출했다.

또 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강경문 위원장은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반을 살피



보고, 그간의 추진상황 점검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만의 정책과 앞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중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놓음 육아나눔터 확대 통한 돌봄 활성화’ 사례
4·3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1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경진대회는 민선7기 4년의 성과를 정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는 공모 결과 58건(광역 42건·기초 16건, 주민추천 16건 포함)이 접수됐다. 1차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총 17건(광역 12건·기초 5건, 주민추천 5건 포함)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주체 돌봄 활성화’(사례명)는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아동돌봄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로 그동안 제주도민 및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아동 돌봄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애써왔다.

전국 유일 지역사회 돌봄나눔 공간 ‘수놓음 육아나눔터’ 사업 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돌봄 나눔 공간인 ‘수놓음 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인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기관표창(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년간의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의회와 4·3유족회가 함께 만든 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적절한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2021년도 30주년 기념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민선7기 4년을 정리하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



상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일본서 현지 홍보

4·3특위 도쿄·오사카 방문
접수 및 지급 절차 설명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견입동)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재일제주인과 4·3유족을 대상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와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일본 도쿄·오사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을 비롯해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하영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이 함께했다.

4·3특위는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재일대한

민국단중앙본부, 제주도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재일대한민국민단오사카, 재일본관서도민협회, 재일본4·3희생자유족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내년 상반기 예정된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

또 4·3관련 인력문제와 조사·홍보에 따른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권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취약했던 일본 내 재일제주인과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등 4·3 경과와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고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단 한 분의 희생자, 유족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특별위 활동계획안 채택

11월 15일 2차 회의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

했다.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활동계획안에는 △사회보장 및 돌봄 △전달 체계에 대한 정책 의제 발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대응 방안 모색 △민·관 협력 거버넌

스 구축과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 등을 포함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치료사 등의 부족에 따른 양성 방안, 취업 보장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일자리로 연계

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이번에 채택한 활동계획안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의 현장과 도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 관점에서 냉엄하게 심의 임할 것”



김경학 의장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제12회 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임하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민선8기 도정과 민선5기 교육행정의 미래비전이 담긴 첫 번째 예산심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인 만큼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요금의 동반 상승까지 예상됩니다. 내년도 민생경제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

서 냉엄하게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삶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망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지원대책,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 살필 것입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주의 기반산업입니다.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반되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 되

었던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실경영은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만큼, 성과와 예산을 반드시 연동시켜 자발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심의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향후 4년의 제주를 좌우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을 반드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취약계층 고려, 세밀하게 살필 것”



김대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동홍동)

2023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물가 인상과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살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며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은 문제가 없

는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안전과 취약계층의 복지문제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을 점검하며 도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장애인과 노인, 학교밖청소년 등의 복지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 등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 다할 것”



김황국 부의장 (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

2023년에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정책기획에서부터 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정책 예산안을 잘 살피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7대 도정과 제인 도민정부 시대, 산업경제 혁신, 풍요로운 삶, 지역균형 성장,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목표 추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게 잘 되었는

지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얼마나 구현해 나갈 것인지 예산편성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김광수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과제인 돌담형 제주교육, 학교제 개편,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추진하는데 계획적인 예산 편성인지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도정과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과 체육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균형발전과 민생안정에 중점둘 것”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원읍)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구 기준의 정량적이고 경직된 예산이 아닌, 조화롭게 분배된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약속드립니다. 도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소

중한 재원이 다시 도민 삶 속에서 행복으로 피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이 넘치고, 제주 농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더불어 사는복지 공동체 제주 만들기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예산의 효율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의 첫걸음 되도록 집중 심사”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제주도정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본예산 7조원 시대의 개막’, 그리고 새 도정의 정책방향이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도민사회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세계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인한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재정운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도정의 ‘건전재정’ 기초 속에서 ‘민생안정’ 기반을 확장하는 재정운용 방향은 매우 적실성 있고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정이 편성한 7조원 예산안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소속 의원님들의 심사 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국비를 비롯한 지방세 등 세입 확충에 충분히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에 적합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등 심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가는길에 힘 보탬 것”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연동을)

흔히들 예산을 ‘한 해의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정이 어떤 수입으로 어떤 지출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계획하면, 의회가 도민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었는지, 또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고 계획했는지를 판단하는 ‘예산 심사’를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 해나갑니다.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었습니다. 소시민으로서의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

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을 때, 정책효과를 잃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선8기 도정은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촘촘복지’로 정했습니다. 그 방향이 단순히 표어에 그치지 않는지, 실제 그렇게 사업들이 설계되고,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건강하고 촘촘한 복지 초점”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민선8기 첫 본예산이 서민·사회적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건강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 예산 중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 특성화 등의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및 도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통하여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사회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

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피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예산인 만큼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받고, 지난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안전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도민 삶에 ‘베네핏’ 될 것”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高)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거대한 물살 속에서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돌다리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적재적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틈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제출된 예산의 돌다리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

겠습니다.

특히 환경도시분야의 예산은 민생 기본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출된 예산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에 도민 여러분의 삶에 베네핏(Benefit)이 가득하도록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불어넣을 냉철한 심사 예정”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민선8기 첫 본예산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열면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활력이 제기된 만큼 지난 3년간 코로나 장기화로 유례없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회복단계에 들어선 문화, 관광, 체육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심사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도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첫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냉정하

게 판단하고 삭감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자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역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규제 아래 위축되었던 문화, 체육, 관광 트렌드 역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예산정책이 마련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을 결정하고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책임감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앞장서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마련”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국민의힘, 표선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각한 경기침체 가운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제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차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농촌 소멸 우려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

른 대책과 농민수당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원전오염수 모니터링,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제주의 농어업이 흔들림 없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도내 생산물에 대한 국내·외 시장 유통 확대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 대응하는 준비태세 갖출 것”



김창식 교육위원장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내년 예산 심사는 제주교육 발전과 학생 행복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기본학력을 비롯해 학생안전과 미래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및 교육자치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의 교육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과 기금 조성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교육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해나갈 것입니다.

미래교육과 4차 산업에 대비한 인재육성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이 학생들을 위해 순항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준비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 심사에 나서겠습니다.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문**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16일에는 김황국·양용만·이경심·임정은·박두화·박호형·양홍식·이정엽 의원이, 17일 현지홍·정이운·양경호·강경흠·오승식·현길호·이상봉 의원이, 18일 현기중·양영식·김승준·이남근·정민구·강연호·송영훈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 방향은



김황국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

▲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에 따른 기본 계획과 예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정책 계획은.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교통관련정책(버스, 트램, 도심항공교통) 방향과 향후 계획은. 도지사 공약인 '15분 도시'의 개념과 관련 용역 추진상황과 읍·면 지역 조성방안은. 도시 재생과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과 원도심 쇠퇴 방지 방안은. (가칭)제주 도시교통공사 설립 의지는.

'15분 제주 도시' 공약 관련 실현 방안은



양용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한림읍)

▲ '15분 제주 도시' 공약 관련해 실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간시설 확보 방안 및 읍면지역 실현방안은. 한림항 개발계획과 관련해 서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거점 항만 육성에 대한 대책은. 한림항 2단계 개발계획 변경계획(1만t급)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은. 스마트농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스마트 농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 방안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지향점은



이경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지속 가능한 제주미래를 위한 도정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지향점은. 육·해상 풍력발전개발 및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2022년 12월 말)에 따른 후속 조치와 풍력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견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도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제주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인권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도로 미지급 용지 관련 종합 대책은



임정은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담팀 마련 계획은. 소극 행정과 관련해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요금감면 규정 미개정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보상은. 지역별 중규모 이상의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성별·지역별 안배 방안과 회의 개최 실적 저조 개선 방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난임 지원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견해는



박두화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제주 난임 지원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평생교육의 성공적 모델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항공우주 박물관 국립화 및 매입에 대한 계획과 활성화 방안은. 삼성혈과 목관아 전면 개방을 통한 녹지공간 확대에 대한 견해는.

4·3유적지 복원·정비 사업 추진 계획은



박호형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 제주4·3유적지 복원·정비 사업 추진 계획은.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문제 및 대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은. '삼성혈-신산공원'일대 제주 랜드마크 발전 계획은.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공약 관련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견해는. 사회복지예산 25% 달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장단기적 계획은. 원도심 지역 주차장 확보 방안은.

무 세척장 농업용 지하수 사용 제한 견해는



양홍식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무 세척장 내 농업용 지하수 사용 제한에 따른 견해는. 제주지역 다문화 정책 활성화 방안은. 소형전기선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실행계획은. 화순항 기본 계획 추진상황과 수산물 복합단지 유통항만으로서의 추진계획은.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은. 국제카페리 신규 취항(상해 ↔ 제주 ↔ 일본) 유치 방안은. 서귀포수협 위생위판장 확장 이설 추진 시 지원 방안은.

도정 복지 예산 및 인력 증가 견해는



현지홍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정부의 정원 동결방침에 따른 도정의 복지 예산 및 인력 증가 견해는. 제2공항 추진 관련 도정의 갈등 관리에 대한 역할과 계획은. 공기관 위탁사업 부가 가치세 과오납 관련 견해는. '15분 제주 도시' 기본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의 범위는. 용역 만능주의로 비춰지는 도민 사회 우려에 대한 견해 및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개선 방안은.

버스 준공영제 문제 개선방안은



양경호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

▲ 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사회복지예산 확대 세부 계획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구체적 계획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 비공개 사유 이유는. 제주 택시 대란 원인 및 해결대책 방안은. 제주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오승식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 (가칭)서귀포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 계획은. 농업용 전기료 및 농자재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은. 노지감골 당도 향상 방안 및 만감류 품질 기준 재검토 필요 견해는. 근로청소년 노동 권리 침해 구제 방안은. 영리법인 대학 유치 추진 현안 및 향후 계획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K-문화 복합조성단지 조성 계획은.

혁신도시 미개발 부지 관련 대책은



이정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대륜동)

▲ 서귀포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 분양 후 미개발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견해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비축토지(공유지) 활용 방안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견해는



정이운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 영어교육도시 지역 주민 소통·화합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 견해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 제주 예술고·체육고 신설 견해는. 행정시에 어린이창의 놀이체험관 건립 계획은. 지역주민 건강·행복 지원 정책 추진 일환 한라수목원 일대 오름산책로 연장 방안은. 위케이션 산업 분야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은. 위기 가정 학생 대상 전문상담가 배치·운영 정책 추진 방안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강경흠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

▲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돌봄 제공기관 확충 계획은. 택배 추가배 송료 등 제주도민 물류비 부담 대책 방안은. 고금리 속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안 추가 수립에 대한 견해는.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제주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 방향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은.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 정책 목표는



현길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천읍)

▲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관련 정책목표와 정책 효과 극대화 계획은. 곳자왈 보호지역 지정 관련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무산 등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은. 곳자왈 보호지역 지정 정책 추진 의지는. 재일제주인 자긍심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은. 농지전용 불허(반려)에 대한 형평성 및 타당성 견해는. 제주시 동부 권역 전통시장 개선 및 복합유통시장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노동 존중 제주 실현’ 실천 방안은



이상봉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읍)

▲ ‘노동 존중 제주 실현’ 과제 관련 세부 사업의 실천 계획 마련은. 노동정책 부서의 기능 강화 방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확대 등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도정의 대응 계획은.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주·서귀포 의료원 운영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방재종합관리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각종 현안 관련 갈등 발생 해소 전략은



양영식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연동갑)

▲ ‘15분 도시 제주’ 성공 전략은. 자전거를 활용한 15분 도시에 대한 견해는. 15분 도시 관련 향후 인력과 조직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지사의 입장은. 향후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은. 각종 현안 관련 공공갈등 발생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인식 및 해소방안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에 대한 견해는. 오버투어리즘 대책 및 지역 축제 안전관리 방안은.

읍면동장 직급상향· 인사운영 방식 전환 견해는



이남근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읍면동장 직급상향과 인사운영 방식 전환에 대한 견해는. 농업분야 보험제도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은.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은.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은. 원도심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문화예술로 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는.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구제 방안은



강연호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표선면)

▲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구제 방안은.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관련 견해는.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및 대책은.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농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 현황은. 국가 지정 성읍민속마을 관련 관리기간 조정 방안은.

제2공항 추진 관련 도정 대응 방안은



현기종 의원(환경도시위원회, 국민의힘, 성산읍)

▲ 제2공항 추진 관련 도정 대응 방안은.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는.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정책 평가와 정책 변화 이유는. 도내 하수처리장 포화 원인과 대책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유는. 차고지 증명제 관련 취약계층 차고지 예외 규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상황은



김승준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 소상공인 지원 관련 상장기업 유치 추진상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관련 대책은. 농촌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은. 농업 분야 직불금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점 및 해소방안은. 물 부족 해소 등 농업용수 공급 방안은. 농업용수 유수율 문제 해소방안 및 저수지 설치 제안에 대한 견해는. 추자도 해상풍력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은.

중·장년층 정책에 대한 기조는



정민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

▲ 민선8기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기조 및 복지정책 확대 추진에 대한 견해는. 제주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주목관아 활용방안은. 옛 제주대학교 병원 부지 활성화 방안 계획은. 제주도민 공항 이용료 면제 방안은. 도 해운공사설립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는. 제2공항 관련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은.

하천 정비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송영훈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원읍)

▲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장·단점 및 이를 보완한 추진 방향은. 저탄소 농업 도입 필요성 및 추진 방안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 필요성 및 방안(품종갱신, 원지정비)은. 감귤의 원활한 유통 및 처리방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방안은.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11월 21일과 22일 2일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이뤄졌다. 21일 강성의·고의숙·원화자·강상수·양병우·이정엽 의원, 22일 하성용·강동우·홍인숙·강봉직·송영훈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갔다.

학교시설 지역주민 미개방 사유는



강성의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북동)

▲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등 학교시설 지역주민 미개방 사유와 향후 계획은. 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설치 추진 시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 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합 운영 방안은. 지역 환경을 이용한 제주형 교육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미래교육'을 담은 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은. 공약사항인 '중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따른 부작용은.

국제학교 자율성 인정범위는



고의숙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 국제학교 자율성 인정범위 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및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안은. 지자체와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100%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계획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교육과정지원센터 등 원도심 지역 내 교육인프라 구축 계획은. 4:3 평화·인권 교육 전국화·세계화 방안 마련은.

학교밖 청소년 장학지원·졸업식 추진 의향은



원화자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학교밖 청소년 장학지원에 대한 입장 및 졸업식 추진 의향은. 다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부족한 이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 현황에 비해 제주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지방공무원 복지지원 개선 방안은.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청 쇄신과 소통에 대한 견해는



강상수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

▲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쇄신과 소통에 대한 견해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관련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 마련 및 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는. 학교 운동장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견해는.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및 통학로 확보 계획은. 학교 주변 도로폭 협소로 학교 부지 필요시 지원 범위는.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맞춤형 상생방안은



양병우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무소속, 대정읍)

▲ 국제학교와 공교육간 맞춤형 상생방안은. 국제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신설 요구에 대한 견해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를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표 브랜드로 성장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폐교 부지 활용 정책에 대한 견해는. 읍면지역 다문화 학생 증가에 대한 기초학력지원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은.

교육활동침해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은



이정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대륜동)

▲ 교육활동침해 관련 현황 및 교원 보호대책 마련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은.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혼란에 대한 대책은. 동지역 과밀학급 해소 및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및 학습 결손 발생으로, 기초학력 향상 방안 재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이에 따른 방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등 개방형 교장공모제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는.

학생선수 관리와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 견해는



하성용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덕면)

▲ 교육청 학생선수 관리와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 견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강화 방안은. 방과 후 학교 강사 및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견해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의견은.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단과의 협력 체제 방안 모색안은.

제주미래교육 위한 역점 정책은



강동우 의원(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역점 추진 교육정책은.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향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및 도청과의 협력 방안은. (가칭)종합교육지원센터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견해는.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견해는. 제주영지학교 분교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는. 아라초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방송통신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은



홍인숙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련 교사정원 및 운영비 증액 등 방안 마련은. 예술 영역별 특화 교육과정체계 마련을 위해 예술 중점학급 운영 확대 및 학교별 특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한 견해는. 학생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체육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놀이터 조성에 대한 입장은. 방과후 수영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수영교육 시수 확대하는 방안은.

사교육비 경감 위한 교육청 정책은



강봉직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

▲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의 정책은. 최근 3년간 사교육비 및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은. 항몽유적지를 활용한 역사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은.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주안점은.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장·단점은.

학교 화재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송영훈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원읍)

▲ 학교 안전관련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마감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학교 화재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특수학급 정원초과 및 미설치 유치원·학교가 많은 이유는.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발생 추이 및 교권 침해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은.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경과 및 운영 계획은. 학생의 비만을 제고 사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의원별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 요지를 실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과 제주특별
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이용자 82% 만족

디자인·메뉴·정보제공 등 문항 다국어 홈페이지 정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의회는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의 82%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홈페이지 이용자 총 124명이 홈페이지 디자인과 메뉴 구성, 최신정보제공 등 전반적인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에 대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만족은 44.3%, 만족 37.9% 순으로 전반적으로 만족

을 나타냈다. 이어 보통 12.0%, 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1.6%로 집계됐다.

12대 제주도의의회 개원에 맞춰 실시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디자인 개편 관련에서는 매우 만족이 38.7%, 만족 37%를 차지했고 보통 14.5%, 불만족 8.0%, 매우 불만족 1.6%를 차지했다.

메뉴 구성을 묻는 문항은 매우 만족 38.7%, 만족 35.4%, 보통 18.5%, 불만족 5.6%, 매우 불만족 1.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속한 정보 제공을 묻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가 37.0%, 대체로 그렇다 49.1%, 보통 9.6%, 별로 그렇지 않다 3.2%, 매우 그렇지 않다 0.8%를 답해 '만족'에 답한 응답자가 86.1%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민 참여 코너 위치 개선과 다국어 홈페이지 관련 정비, 중복 메뉴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 감귤과 농업, 미래산업으로 육성하자

지난해 감귤 조수입이 1조원을 넘었다. 감귤을 산업화한지 약 50년만이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상황 속에서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하지만 첫 1조원대 돌파라는 기념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 특히, 3고 시대라 불리는 고물가 속에 농자재를 비롯한 영농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유가와 고금리가 농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통 오를 줄 모르고 있다.

도정에서는 이미 1997년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에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0년대 말, 행정에서 감귤을 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귤식재를 장려하여 오늘날에 이르렀



농업인력 감소
농지 한계
스마트 첨단기술로

강 충 룡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 제주지역이 도서지역으로 한계와 취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인 물류비 문제는 농업인들이 100% 부담하고 있다. 불편함을 넘어 제주 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이전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도정에서도 이에 대해 포기한 모양새이

다. 하지만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제주 농업인들의 물류비와 농자재에 대한 추가부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요구는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감귤 조수입 1조원은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다.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인력 감소와 농지의 한계를 스마트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석유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를 연계하여 농업의 체질을 전환시켜야 한다.

도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 에너지와 에너지 분산특구 등 미래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제주 감귤과 농업이 갖는 청정성과 특화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로 환경 지켜요

식품업계에서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한 친환경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뉴스를 봤다. 어떤 업체는 500ml 투명 페트병 약 1만4700개를 재활용해서 유니폼 약 2100벌을, 어떤 업체는 500ml 투명 페트병 약 6만4000개를 재활용해서 유니폼 약 5000벌을.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페트병 몇 개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은 혼합 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고,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만8000t 이상의 페페트 및 재생 원료를 수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입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재활용 원료 확보에 대한 필요성



재활용 자원
별도 배출 장려
자원회수 보상제 시행

변 광 수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이 대두됐고, 2020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음료·생수 무색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하는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연계해 2021년 12

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비닐류로 재활용)을 제거한 후에 압착하고 뚜껑을 닫고 지정된 요일에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단, 유색 페트병, 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의 일회용 용기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아닌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제주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 자원의 별도 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회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청정 제주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이니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에너지바우처로 포근한 겨울나기

최근 들어 뉴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천연가스(LNG), 연탄, 석유 등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가격 상승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EU(유럽연합) 국가들은 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줄이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도 다가오는 겨울철 전력난을 우려하며 에너지 다이어트를 추진하는 등 2022년 현재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



에너지 가격상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류 시 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결

정된다. 대상자는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지원금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실물카드' 둘 중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료비 상승으로 더욱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특히 필요한 시기임으로 주위에 놓치는 이가 없도록 알리길 바란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민분들은 하루빨리 주민센터로 찾아와 담당자의 따뜻한 안내를 받아, 에너지 바우처로 포근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행복 빵빵, 사랑 빵빵”...빵 나눔 봉사

도의원 13명 직접 만들어
도내 17곳 시설 등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지난 11월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빵 나눔터를 찾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김대진·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의·강하영·고의숙·김경미·박두화·원화자·이경심·이승아·홍인숙 의원 등 의장단과 여성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의원들이 직접 정성스레 만든

빵은 사회취약계층을 위로하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코로나19 격무 부서 등에 전달돼, 지역 내 온기를 더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의회는 ‘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제주의회의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들이 착용한 앞치마에는 사회복지시설 성자현에서 생활 중인 고혜린·김지연·부선혜·송윤아·이선희 작가 등의 작품 13점을 새겼다.

추자면 항만개발현장·뉴딜300사업장 찾아

11월 8일 농수축경제위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11월 8일 제410회 임시회 폐회 중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추자면을 방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추자·신양안에서 어업인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어선접안시설을 비롯한 물량장 및 방파제 보강사

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중인 묵리항을 방문해 올해 제주시에서 발주한 기본계획 수립 진행 현황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신양리에 위치한 참조기 가공공장을 방문해 가공현황 및 HACCP인증을 위한 추진계획 등 수산물 수급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가공 동향을 파악했다.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워킹그룹 회의

보건복지안전위 발전방향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11월 8일 제주의회의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의회의 돌봄사업 운영현황과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상황, 도교육청

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고 지역 사회내 돌봄체계 운영방향 등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에 다양한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복지 정책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는 지난 11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이 좌장을 맡고, 김용 교수(한국고원대학교 교수)가 ‘제주형 자율학교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이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교육 발전에 끼친 영향과 성과를 되짚어 보고, 공교육에서 향후 경쟁력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인 i좋은 학교, 다한디배움학교 등이 제주교육발전에 끼친 성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주인 재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참신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천 위한 동행 선언

도의회 탄소중립연구포럼
인화초·탄소중립지원센터

제주의회의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대표 이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과 인화초등학교(교장 윤정애), 제주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강진영)는 지난 11월 18일 인화초등학교에서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동행 선언식을 개최했다.

‘다(多)가치 E.C.O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동행 선언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동행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승아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적 목표”라면서 “관심과 참여, 실천 없이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다짐이 제주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도민 모두에게 하는 작업이지만 큰 약속이다.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실천하여 제주가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2일 창립된 제주의회의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에는 이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상수·이상봉·양영식·송영훈·강충룡·양경호·박두화·김승준·양홍식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6기 옴부즈맨 운영위 구성

지역별·대표성 고려 15명 선임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10월 26일 제주의회의 소회의실에서 제6기 제주의회의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대표 옴부즈맨 5개 분과위원장, 지역별·대표성을 고려한 9명 등 총 15명으로 오는 2024

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의회 옴부즈맨 활동계획 검토를 비롯해 옴부즈맨 역량강화 사업 추진, 제언·제보 처리상황 점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경학 의장은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고충, 민원 내용에 대해 귀를 기울여 정책의 틀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